

# 비상경제대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정 윤 한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서기관

##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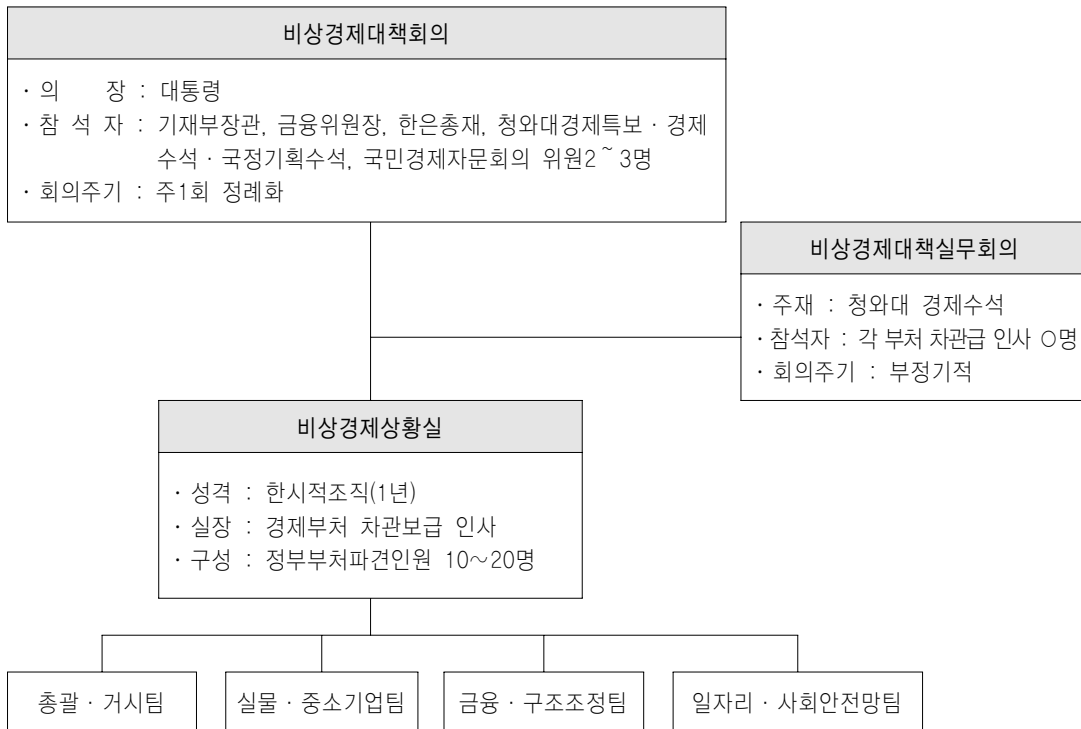
지난 1월 2일 대통령은 신년국정연설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비상경제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1월 8일 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곳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주요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논의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아래에 이른바 비상경제상황실을 따로 두기로 했다. 일종의 War room(전시작전상황실)이라고 할 비상경제상황실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그래서 거시·일자리,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사회안전망의 네 팀을 나누어 분야별로 프로젝트 실행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비상경제상황실은 하루하루 긴박하게 움직이는 여러 분야의 상황들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일을 한다.

지난 8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모든 정부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효율이 높아진다.”며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러한 당부말씀의 의미는 향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본방안으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강조한 것이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비상경제상황실은 이러한 기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점검을 주로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주요 부처 역시 별도의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도 1월 9일 즉시 기존의 지방재정조기집행상황실을 확대 개편하여 비상경제상황실로 개편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비상경제상황실 구성현황〉



## 2. 행정안전부 비상경제상황실의 운영

행정안전부 비상경제상황실은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가동되고 있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전 부처 및 자치단체의 경제난국 극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 지방재정의 쟁점

비상경제상황실은 상황실장과 단장, 총괄지원팀, 재정조기집행반, 일자리창출반, 확인점검반 등 약 5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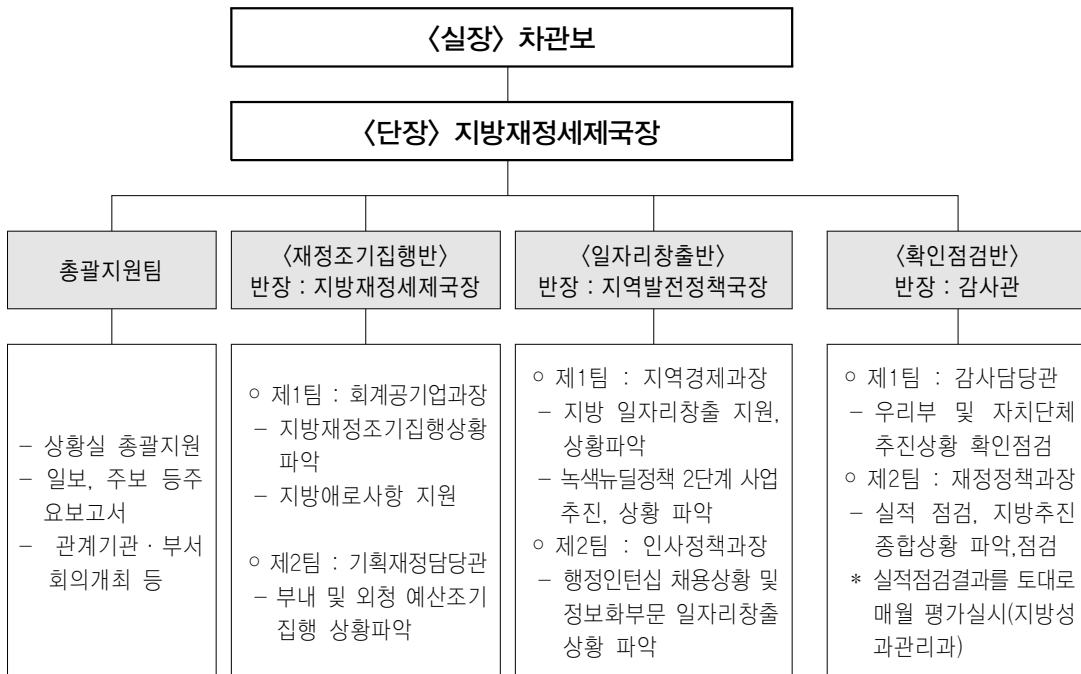
총괄지원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 총괄지원업무를 맡아 일보, 주보 및 주요보고서를 작성·보고하며 관계기관·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 밖의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재정조기집행반은 행정안전부와 외청인 경찰청, 소방방재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기집행 기획·지원 및 상황파악을 중점으로 하며, 조기집행과 관련한 애로사항 지원과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일자리 창출반은 행정인턴십, 예비공직자 조기 실무훈련, 정보화 일자리 창출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관련 기획·지원 및 상황파악과 녹색뉴딜정책 등 각종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한다.

확인점검반은 부내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 일자리창출 시책 등과 관련된 감사, 조사 활동을 통하여 해당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해소·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전반적인 재정조기집행, 일자리창출 실적 점검·평가 하고 예산중복·효율성 현장점검 및 개선사항을 마련한다. 여기에서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포상이나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비상경제상황실 구성현황〉



\* '재정조기집행반장'은 단장(지방재정세제국장)이 겸임

### 3. 그간 주요 정책과제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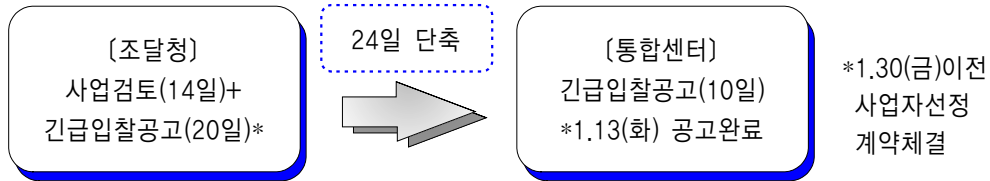
첫째로, 행정안전부 비상경제상황실은 경제난국 극복에 자치단체가 앞장설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지방채 발행 확대 시행, 부동산 교부세 보전을 위한 예비비 조기 사용신청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구체적으로, 계약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분할계약 확대 방안’을 추진(1.12 공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중소 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도로·하천·하수도 등 공사 분할계약의 범위를 대폭 확대(1. 9 대통령 지시사항)하였고, 지방재정법·계약법 시행령 개정(1.13 공포)을 통하여 일상 경비 범위의 한시적 확대 및 교부금액 제한 완화, 기술용역 수의계약 범위의 한시적 확대 및 조기집행 사업의 계약 심의위원회 생략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지역 중소건설업자 공사 참여 확대와 보호·육성을 위한 지자체 발주공사 지역제한 금액 상향(일반공사 70억→150억, 전문공사 6억→7억)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5~1.22)하는 등, 각종 계약상 절차 상 지연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이루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확대 방안을 추진하여 한시적으로 금년도에 대하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지원을 위해 편성된 목적 예비비(1조 8,600억원)를 지자체에 조기 배정하여 내수 경기진작을 위해 목적예비비 전액을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비의 사용은 1월 14일 이후 신청하여 실제 지자체 교부는 2월 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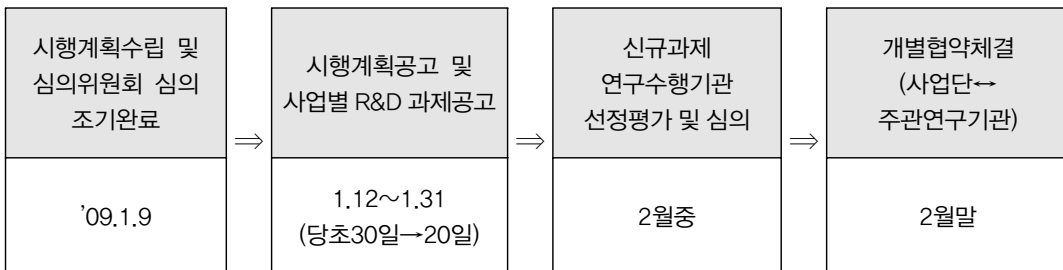
둘째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종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하고 그 내실화 지침을 마련하여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인 행정인턴제도를 마련·실시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인턴십 내실화 지침’을 통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행정인턴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6개월 또는 1000시간 이상 근무한 행정인턴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10% 이내의 행정인턴에게는 장관으로부터의 입사 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인턴십 이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종 언론 및 매체를 이용하여 행정 인턴 관련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2일부터 중앙행정인턴 고객만족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인턴제의 전담 관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공무원 임용전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 독려하고 있다.

셋째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중앙행정부처에서도 기존의 통상적·관행적 업무처리 절차를 탈피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는 자체 긴급입찰 추진으로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24일 단축하였고,

## 지방재정의 쟁점



정부청사관리소에서는 청사 어린이집 신축 설계기간 단축(90일 ⇒ 45일)을 통해 예산액 100% 상반기집행 및 일자리 135개 창출 효과를 도모하였으며, 소방방재청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재난안전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공고기간 10일 단축으로 5개 사업에 대해 1/4분기 내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넷째로, 행안부 비상경제상황실은 시·도 비상경제상황실과 상시 연계체계를 유지하여, 지방의 비상경제 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조기집행 상의 애로·건의사항을 즉각적 해소하며, 비상경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9 현재, 전국 15개 시·도가 비상경제상황실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서울·전북 등 일부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클로징 10(Close by oct.) 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10월에 모든 공사를 마감하는 가상회계연도(전년도 11월 - 10월)를 도입하여 한발 빠른 사업 준비 및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클로징 10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표에 의거 매월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통해 예산의 조기집행은 물론 우려되는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내수 경기 진작 및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9년 시행사업 현황, '09.1.13현재〉

| 구분  | 총 대상 사업     | 설계완료 사업     | 설계 중 사업       |
|-----|-------------|-------------|---------------|
| 사업수 | 314건        | 265건(84.4%) | 49건(대규모 턴키사업) |
| 예산  | 831억원       | 253억원       | 578억원         |
| 집행액 | 22억원(2.65%) | 22억원(8.7%)  | -             |

\* '09년 10월말까지 99.7% 준공목표로 추진중임.

이외에, 경상북도는 '09년 신규 용자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이자지원을 확대 (당초 3%→5%) 하여 중소기업의 재정난을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평택시는 공휴일 포함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36524” 민생안전 비상대책단(단장 : 시장)을 설치하여, 쌍용차 회생 지원, 조기집행, 기업애로 해소지원, 일자리 창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교통·물류 관리대책을 마련하였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시내 주행속도 10% 올리기 위한 교통관리대책」을 추진하여, 차량·물류 소통향상에 경찰역량을 집중(현재 22.0 km/h ⇒ 목표 24.2 km/h)하고, 방법순찰대(1일 546명 ⇒ 1,625명)를 동원하여 경제활동에 기초가 되는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km/h 속도 향상 시 1조원의 교통혼잡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경남·전남경찰청에서는 설 연휴 기간 재래시장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안내 시설물 점검, 주차장 확보 및 교통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BH 비상경제상황실장회의를 통해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조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 확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토지수용 손실보상 일정 단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조 중이며, 시·도 출연기관 문화재 조사 상피제도 폐지를 위하여 문화재청 등과도 협조 검토 중이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비상경제정부 하에서 사업 담당자들이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예산 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예산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을 마련하고, 이의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한편 사후에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예산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각 사업 담당자들이 준수해야할 내용을 담고 있다.

### 행정안전부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출연금은 기획재정부 자금배정 즉시 자치단체 등에 교부한다.(자금 배정전 사전절차 완료)
2. 계약은 긴급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활용한다.
3. 선급금은 최대금액(상한 70%)을 계약 다음날 지급한다.
4. 대가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한다.
5. 1회성 자산취득비는 1월 중에 모두 집행한다.
6. 소모성 비품은 1분기내로 모두 구입한다.
7. 공공요금은 청구일 당일 지급한다.
8. 특근매식비는 1주일 단위로 정산 지급한다.
9. 정책연구용역비는 확정 후 10일 이내 발주한다.
10. 우리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4. 맺음말

미래가 불투명할 때 누군가 나서서 길잡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혼란과 당혹감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앞 길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을 통해 국가간 치열한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경쟁이 극심하게 이뤄질 것이며 그 결과로 국가간 경제적 능력의 서열이 뒤바뀔 것이다.

정부에서는 단순히 과거 답습적인 일자리 창출과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바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미래 대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정, 발표했다. 5년, 10년 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녹색기술산업과 첨단 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의 3개 분야 17개 사업에 1조6000억원의 R&D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에 대한 효율적인 R&D 예산 배분을 거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온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공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산업화, 정보화, 선도적 IT강국으로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정부와 공무원이 선도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길 온 국민은 기대할 것이다. 🍀